



##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명태균 특검법은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 다시 발의해서 통과시킬 것!”



<찬성 197표, 무효 4표, 반대 98표 아쉽다.  
그러나 명태균 특검법은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당을 규탄하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검법을 다시 대표 발의해서 통과시키겠다!>

‘명태균 특검법’ 이 재석 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하지는 못하고, 갈등했었던 흔적이 보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명태균 특검법’의 통과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단 3표가 부족했지만,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명태균 특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의힘의 양심있는 의원들도 인정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몸통은 공천 개입을 하며 국정농단을 행한 윤석열과 김건희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 12.3 내란까지 일으켰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파면됐고, 공천개입과 국정농단의 주범인 김건희는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와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오세훈 시장은 대선에 불출마하며 소환을 앞두고 있고, 오세훈 시장과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후보는 카톡과 여론조사비용 대납 문건 등 증거들이 계속 공개되면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을 ‘국민의힘 궤멸법’이라고 하더니 수사받고 처벌받을까봐 그런 겁니까. ‘명태균 특검법’에 반대한 국민의힘 규탄합니다.

대통령도 없는데 경호처가 막아서 대통령실, 공관촌 압수수색이 또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영장을 또 반려했다고 합니다. 국민께서 검찰 조사를 믿지 못하고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이유입니다.

명태균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의 진상과 내란의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과 정의 실현으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합니다.

명태균 특검법 통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명태균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통과시켜

다시는 국정농단과 비상계엄 선포란 국가 비극이 초래되지 않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설 것입니다.

2025. 4. 17.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 단장: 서영교
- 부단장: 김병기, 한병도
- 위원: 김승원, 전용기, 김기표, 김용만, 박균택, 박정현, 송재봉, 양부남, 염태영, 이성윤,  
이연희, 허성무

### ● 서영교 단장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의 찬성 197표, 무효 4표, 반대 98표. 이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되어서 윤석열,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 윤상현 등 명태균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길 원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단 3표가 모자랐으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3자 추천이 아닌, 윤석열과 김건희를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을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당장 소환하십시오.

검찰은 오세훈, 홍준표도 소환하십시오.

이제 윤석열은 파면돼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윤석열을 소환하고 조사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더불어서 내란특검법도 오늘 단 3표가 모자랐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재발의해서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재판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작정입니까?

생중계를 왜 불허합니까?

그런 행동들은 윤석열과 공범이 되는 것임을 지적하면서

국민 앞에 모든 범죄자의 재판이 생중계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두더지처럼 지하 통로로 들어가는 특혜를 윤석열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합니다.

내란사범입니다. 내란우두머리는 최고 사형을 받아야 하는 범죄입니다.

내란우두머리를 더 이상 특혜로 보호하려고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